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이 지역의 산업육성 기반을 확충·확대하는데 주력한 결과, 지역별로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및 잠재력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에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청이 25개 사업(세부내역사업 기준으로는 44개)을 통해 1조 6,79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광역발전계정 중에서 2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SOC사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산업·기업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산학협력, 과학기술진흥 등)를 개별적으로 확충·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원사업 간의 연계 추진을 통해 이들 요소의 결합·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개선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여건·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은 추진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개별사업 간의 칸막이 운영이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세부과제 단위의 예산편성, 사업기획·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별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 기획·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의 구조 개편과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을 광역발전계정의 지역자율형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중석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jsjung@kie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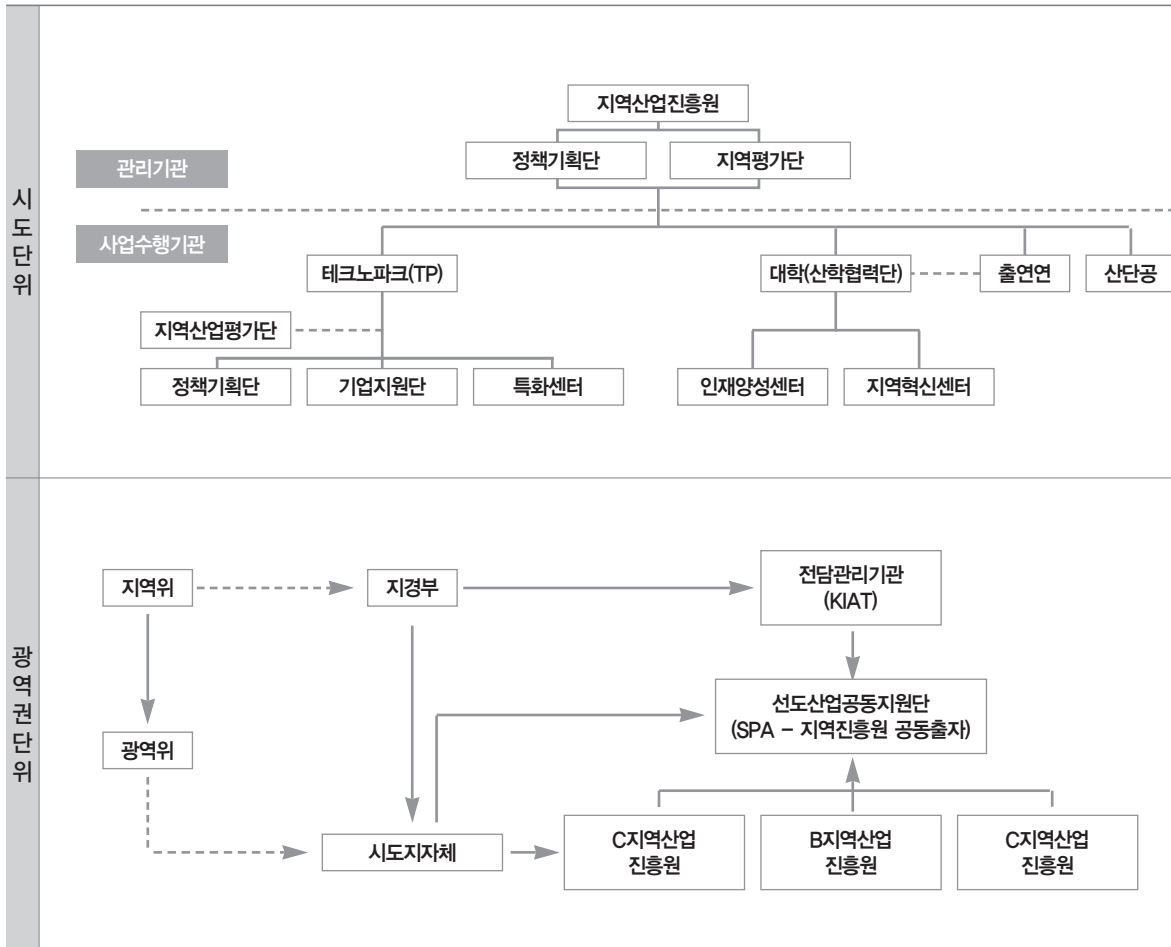
편성방식	계정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역자유휴	중앙주도형	
지자체 자유평성		시도자유평성사업	-		시도자유평성사업
		시군구자유평성사업	-		특별지방행정기관경비
부처편성		-	시도자유평성- 부처조정사업	부처 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셋째, 지역자율형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분야의 조정, 세부과제의 예산조정, 사업프로세스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합 추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앙은 관련 부처의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전조정 및 컨설팅 등을 통합 실시하는 방식과 같이 중앙-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조사·분석 기능을 (가칭)지역산업진흥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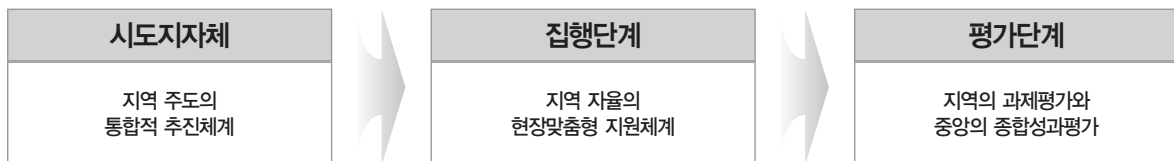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 추진에 따른 종합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 자원의 현장맞춤형 지원

중앙주도형 사업(현행)	지역자율형 사업(개편)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지역주도 통합거버넌스 개편(안)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지역주도 통합거버넌스 개편(안)



체계 구축', '중앙-지역 간의 역할분담(지역의 과제 평가 → 중앙의 종합성과평가)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도의 통합

적 추진이 성공적으로 착근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적격성평가제도의 도입, 지역R&D의 중복성 검증체계 강화, 지역기업 대상의 패널리기업조사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추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